

의혹 은폐? '제2의 배후설' 증폭

■ 핵심 4인 줄줄이 말바꾸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흥기삼 전 동국대 총장, 임응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장운 전 동국대 이사 등 '핵심 참고인 4인방'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신씨가 동국대에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 이후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이 한때 은폐됐다 가 폭로되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재청구 검토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변 전 실장을 비롯 이들 핵심 관련자들은 그동안 신씨 사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 왔으나 의혹들이 하나 둘씩 실체를 드러내자 잇따라 해명을 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신씨 문제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압수수색에서는 신씨와 노골적 감정표현 등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신정아 사건 관련자들 말바꾸기와 거짓말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신씨의 총감독 내정 실수가 권부나 정치권의 외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9월 3일 기자회견) "변 전 실장이 신씨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탁했다" (9월 12일 검찰 관계자 전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신씨와 개인적 친분은 없다" (8월 24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해명) "장운 스님을 만났을 때 신씨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고 신씨의 예일대 선후배 관계로 잘 아는 사이로 언박이 있었다" (9월 1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장운 스님	"본인 말로는 변 실장을 만나 신정아씨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8월 28일 조계종 대변인 대리 기자회견) "변 전 실장과 만나 신씨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외압이나 회유를 받지는 않았다" (9월 10일 언론 인터뷰)
흥기삼 전 동국대 총장	"총장과 대학 행정당국이 속은 사건이지 어떤 부도덕한 거래가 개입된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다" (7월 20일 '동국 가족에게 드리는 글') "변 전 실장이 '예일대 후배로서 매우 촉망받는 큐레이터'라고 추천했고, 학력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신씨를 임용했다" (9월 10일 검찰 조사)

검찰, 한갑수·변양균·장운 스님·흥기삼씨 등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연결고리' 가능성 주목

신씨의 거짓 학력을 폭로한 장운 스님도 지난달 28일 조계종 대변인을 통해 "변 실장을 만나 신씨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10일 언론과 인터뷰에선 "변 전 실장과 만나 (신씨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외압이나 회유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흥기삼 전 동국대 총장 역시 지난 7월 "총장과 대학당국이 속은 사건이지 부도덕한

거래가 개입된 채용비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10일 검찰 조사에선 "변 전 실장이 '예일대 후배로서 매우 촉망받는 큐레이터'라고 추천해 학력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신씨를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신정아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한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1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신씨를 감독으로 선임한 과정에 변 전 실장이 의

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12일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전 이사장은 "변 전 실장과의 공직 인연 때문에 감독선정에서 외압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독선정과 관련해 변 전 실장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 사이, 또는 이 두 사람과 제3의 유력 인사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들이 단순히 중간 연락책이 아니라 변 전 실장 등 외부 인사가 신씨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맡았거나 스스로 나름의 목적을 갖고 신씨 비호나 의혹 은폐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 후원 유치 등과 관련해 신씨측과 외부 기업인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3일 광주비엔날레 선정위원, 동국대 재단 관계자, 성곡미술관 후원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조사하는 등 우선적으로 '외과' 수사를 통해 이들 4인방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경찰청에서 각 언론사 취재진이 변 전 실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미술품 구입 예산 급증”

2005년 9,700만원...전년비 8배 늘어

한나라 김희정 의원 주장

청와대가 지난 2005년 이후 미술품 구입 예산을 대폭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김 의원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미술품 구입 지출액은 지난 2004년 1천 200만원에서 2005년 9천700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2006년에는 서양화 한 작품을 구입하는 데 1억5천만원을 쓰기도 했다.

미술품 임대 전사를 위한 예산도 2004년 1천670여만원에서 2005년에는 9천3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구입 건수도 늘어 2004년에는 불과 한 작품을 구입하는 데 그쳤으나 2005년에는 그림작품 뿐만 아니라 도자기와 목공예까지 모두 12개 작품을 구입했다.

김 의원은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처에서 구입한 미술품들을 조달청에 보고하지 않아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을 어겼

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보고하지 않은 미술품은 2점으로 가격은 4천만원대로 알고 있다"면서 "신정아 씨가 작품 구매에 관계가 있는지 해당부처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수장이 있는 부처에서 구입한 미술품의 보유현황 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면서 "법 위반을 한 기관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조사를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내 미술발전을 위해 미술품 구매 및 임대가격을 현실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의 미술품 임대 예산 증가와 관련, "시공과 비교할 때 청와대에서의 미술품 임대료 가격이 턱없이 낮아 미술계 발전을 위해 임대가격을 현실화해 올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 2의 휴대전화 찾아라

'신정아 리스트' 가능성, 또다른 화약고 부상

검찰이 13일 신정아씨가 사용한 여러 대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에 따라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비호 의혹과 '또 다른 배후'의 존재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가 아니다. 신씨가 최근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직 찾지 못했다. 찾는 중이다"라고 밝혀 신씨가 보안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신씨가 사용한 여러 대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통해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통화내역 분석으로 신씨와 변 전 실장의 통화 시점과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신씨가 교수와 예술감독이 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변 전 실장의 소환을 앞두고 직권 남용 등 변 전 실장의 혐의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검찰에 신씨의 휴대전화 기록은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신씨가 7월12일 유럽에서 비밀리에 귀국한 뒤 나흘뒤인 16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의 통화기록을 통해 비행기 샅이나 체류비용 등 신씨의 미국 도피를 도운 인물도 찾을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신씨의 출세가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제2, 제3의 변 전 실장'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변 前실장 출두 임박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경찰청에서 각 언론사 취재진이 변 전 실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아 누드 '충격'

문화일보 게재...선정성 논란

신정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중앙일간지가 신씨의 전신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진이 발견된 장소는 문화계 유력 인사의 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13일자에 "신씨가 맨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사진을 입수했다"며 "신씨는 책들이 꽂혀 있는 방의 욕실 앞에서 다소 속스러운 표정, 또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과 측면, 뒷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사진 전문가들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끼워 맞추려 함성사진이 아니다" "너무도 사적인 분위기에서 일반카메라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촬영

한 구도와 신씨의 표정으로 볼 때 작품용 누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또 한 미술계 인사의 말을 인용 "신씨가 영향력 행사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라고 전했다.

이 사진이 게재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2위에 '신정아' '문화일보'라는 단어가 급부상했고, 해당 신문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불능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 문화계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면서도 아직 범죄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확인됐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사생활을 대중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선정성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청계공원을 추천합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text describing the park's beauty and activities)

토남지족 최고의 장미지족 무한한 가치보장!

토남지족의 장미지족은... (text about the real estate project)

토남지족의 장미지족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11년 389일 연체제도 현상업무 완결!

■ 시행사

■ (주)다림주택

■ 개발업자: (주)다림주택